

# 특별자치도 특례조항 미비점 보완

### 민주 윤준병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확충 개정안' 대표발의 '규제자유·지역특화발전특구 등 핵심 특례과제 선정 지원체계 마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2024년 1월 18일 출범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체적인 발전사업들의 집행 근거로서의 각종 특례조항을 구체적으로 보강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전라북도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시·군 14곳 중 11곳이 소멸위기에 놓여 있고 도의 재정지립도와 경제력지수 또한 최하위므로 전북의 지역적·역사적·인



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만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오랫동안 전북 도민과 출향민 전체가 땀땀 뿜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전북민의 강점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이 그 성공의 열쇠"라고 말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1년도 남지 않았는데, 막상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는 지역발전과 먹거리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특례조항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

적인 출범과 전북 도청소재지 전주시를 포함한 6개 시와 8개 군의 발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전북과학기술원, 연구개발특구, 교육자유특구 등을 핵심 특례 과제로 우선 선정해 권한이양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라는 것"이라고 법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윤 의원은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에 필요한 특례과제를 발굴하여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법안에는, 신정훈·김철민·양정숙·김성주·최종윤·오영환·홍정민·김민철·서영교·한병도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 “국힘·정운천 논평 무책임한 발뺌”

### 임정엽 전주를 예비후보 “전북 국가예산 증가율 관련 정부 공식 발표 무시 반토막 진실 덮으려는 것”

임정엽 전주지를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일 입정문을 통해 “전북 국가예산 증가율이 반토막난 데 대해 국민의힘과 정운천 후보는 말장난으로 진실을 덮으려하지 말고 170만 도민 앞에 사죄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임정엽 예비후보는 “저는 어제 정부 발표 등을 토대로 2023년 전북 국가예산 증가율(2.49%)이 정부예산 증가율(5.1%)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을 지적하고 분반을 촉구했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반성과 사과대응 해괴한 논리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발뺌하며 도민을 재차 우롱하고 기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 고향 전북 고향사랑 기부제 응원 퍼포먼스' 국주영은 의장을 비롯한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2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내 고향 전북 고향사랑 기부제 응원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돼야”

### 염영선 도의원, 촉구 건의안 발의... “한반도 역사상 최초의 민중혁명·민주화 운동 효시”

전북도의회 염영선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정읍)이 2일(목)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염영선 의원은 "1894년 신분제 중심의 낡은 봉건제를 타파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위대한 민중혁명인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이후 3·1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 시위혁명 등으로 이어지며 대한민국의 역사적 순간마다 큰 영향을 끼쳐왔지만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포함하려는 시도가 이번이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지적



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3·1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 33명 중 2명이 동학혁명 참여자이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반인 백범 김구 선생이 황해도 동학군의 접주로

활약했다는 것은 그 어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한반도 역사상 최초의 민중혁명이자 민주화 운동의 효시인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올바르게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정부가 개헌을 통해 이를 헌법 전문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와 각 당 대표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 “농어민 기본소득제도 도입하라”

### 윤정훈 도의원, 도의회 민주교섭단체 대표연설

윤정훈 도의원(무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2023년 첫 회기인 제397회 임시회(2월 2일 개회)에서 “농어업·농어촌 기본소득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농생생 수도인 전북도가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정책 운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농민과 농업이 탐관오리



들의 수탈 대상이 있다면 현재는 영농자가격 폭등과 쌀값 하락으로 영농환경이 현재도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서도 소외되는 등 정부의 무관심적극 협력하고, 정책 운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과 차가움을 거두고 보다 따뜻한

시선과 섬세한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우리 전북은 개발독재시대에 영·호남 지역차별로 고통받고 지방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으로부터 차별받고, 광주·전남·전북이라는 호남으로부터도 소외되고 차별받았다면 동부권은 전북에서마저 소외 받아 4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이라고 강조하고 “무주·진안·장수 등 동부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사업 발굴과 성장주무주 고속도로 및 동서철도의 조속한 완공으로 지방인구의 1/2이 넘는 영남 인구가 전북으로 들어오는 전략적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부권 재정계획을 재수립해 추진한다”고 주문했다.

/김재훈 기자

##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

### 비회기 중에도 현장방문 나서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비회기 중에도 주요 사업지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일 인화공원 조성사업지와 다래못 서식처 복원사업지를 방문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했으며, 특히 올해 추진되는 인화공원 숲리메타누리길 조성사업에 대해 기존에 조성된 무장애 나눔길과 차별화된 특색있는 산책로가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익산=이재훈 기자

## 도의회 운영위, 정무수석 등 대상 업무보고

전북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수)는 2일 정무수석·정책협력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김정수 위원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취지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뽑은 것은 의원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고 강조하고 “정책지원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타

시도의회 운영 사례에서 확인된듯이 인사권 독립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체제 전반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명연 의원은 “재해 복구부터 다시 새민금을 둘러싼 관할구역 문제가 불거져 분쟁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며 “도 갈등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질문하고 “도가 관할권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승식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이 가장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북문화관광재단이나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무수석 등 정무라인이 도의회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영국 의원은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협력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김재훈 기자

## 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

### “국기원 태권도원 이전 실기하면 영원히 물거품”

### 강동화 도의원, “서울시와 이전 협약 체결로 인근 수도권 지자체들까지 물밑 움직임도, 파격 인센티브 제공 통해서라도 협상해야”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이 2일 열린 도의회 제397회 임시회에서 시·국기원 이전 노력에 다시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무주 태권도원은 내년이면 개원 10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태권도 성지 조성 및 태권도원을 세계적 관광자원으로 육성한다는 야심찬 포부와 달리 현재 태권도원은 태권도 메카로서의 위상은 고사하고 시설운영 활성화도 제대로 안착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는 국기원 이전 논의마저 손을 놓고 있어 전북 도정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중에서 태권도원이 배제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최근 국기원이 서울시와 이전 협약을 체결하면서 서울시는 물론 인근 수도권 지자체들까지



지 국기원 유치에 관한 물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1974년 법인으로 설립된 국기원이 현 소재지에서 처음으로 통지를 옮기려고 하는 것인데 이를 방치할 경우 국기원의 태권도원 이전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동화 의원은 “국기원 이전은 단순히 태권도 단체 하나를 옮기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기원 이전은 곧 태권도원이 태권도 성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되는 상징적 계기가 되기 때문에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라도 국기원 이전 협상에 다시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관영 지사는 기업유치에 관해서는 특혜사에 휘둘러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호한 결의를 밝히기도 했는데, 그러한 과감한 도정이 기업유치 효과에 못지 않는 국기원 이전 사업에 비껴갈 이유가 없다”며 김관영 지사가 국기원 이전을 위해 직접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 “학폭·청소년 우울증 증가 방지책 마련을”

### 최형열 도의원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전주,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제39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폭력 및 청소년 우울증·자살 증가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학생의 인권신장, 상담 및 인성교육의 강화, 학교 내 벌집제도에까지 시키면서 학생의 교사 폭행 등 교권이 추락하고 있고 소년법의 보호 아래 학교폭력은 잔혹한 범죄 수준에 이르렀으며 청소년의 우울증·자살률은 급증하고 있어 교육부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1년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전년 대비 2배 증가했고, 아동·청소년 우울증 진료 건수는 2019년 약 35만건에서 2021년 약 9만8000건으로 약 20% 증가했으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청소년(9~24살) 자살률이 2017년 약 7명에서 2020년 약 11명으로 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기 받은 신체적·정신적 폭력은 성인이 되어도 장애나 트라우마로 남는 경우가 많아 미국의 경우 200명당 1명의 상담교사 배치를 권장하고 있으나 전라북도 의 경우 교사 1명이 501명이 넘는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고 상담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최 의원은 “아동의 성장이 빨라져 초등학교부터 우울·자살 등의 예방적 전문상담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국내 초등학교 421개교 중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약 30%(127



명) 수준인 반면 진료·진화상담교사는 99.7%(420개교) 배치되어 있어 교육감의 교육과제는 정반대의 실정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의원은 도내 중·고등학교 상담교사(비정규직포함) 배치율은 국·공립 중학교가 68%인데 비해 사립의 경우는 18%만(49개교 중 9곳) 배치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국·공립 80%, 사립은 32% 수준으로 교육에서 마저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최 의원은 지난해 말 대대적으로 홍보한 교육감 공약이행을 중 위클래스 및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 초과 이행률(공약이행률33%)에 대해 꼬집었다.

실제 위클래스 설치율은 전년 대비 0%이고 교사 선발인원도 전년 대비 68% 감소했으며 실제 이행된 것은 소규모 학교 영원의 기간제 교사 1명 배치 외에 전문 상담에 대한 정책은 교육감의 올해 10대 핵심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최형열 의원은 “평등한 수혜가 가능한 예방적 전문상담 체계를 구축해 우리 사회의 모든 청소년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재훈 기자

##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 소각장 우수시설 벤치마킹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남숙 의원)가 2일 경기 평택의 에코센터 방문에 소각장 및 주민편의시설의 조성 및 운영 방식 등을 벤치마킹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전주권 광역소각장 원센터의 운영기관인 2028년 9월 민료법에 따라 새로운 소각장 건립 및 운영에 타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고자 계획됐다.

복지환경위 소속 의원들은 국내 최대 지하화 시설을 갖추고 지상에는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배치한 평택 에코센터의 운영을 둘러보며 전주시 소각장원센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이남숙 복지환경위원회장은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고 고민하여 시민에게 알맞은 시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아름 기자